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학 부교수

관료주의란 조직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적 관료들의 체계를 말한다. 관료주의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평 무사의 원칙에 따라 합리성을 실현한다. 임용과 보수에 있어 능력주의에 따르고, 통제력의 집중과 위계적 질서에 의하여 효율성을 발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료주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독선적 권위주의, 행정적 형식주의, 무사안일, 책임전가, 규정 만능주의 등을 말한다. 관료주의에 젖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급자에 대하여는 아첨하고 하급자에게는 거만하며, 까다로운 업무는 적당히 넘기고, 자기 업무 이외에는 무관심하며, 독선적인 데다, 책임에 대

전기요금과 관료주의의 벽

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온라인에서 찾아본 ‘행정학 사전’ 등은 관료주의를 이처럼 풀이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은 이 같은 부정적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여 준다. 숨 막히는 더위에 시달리는 국민들이지만 에어컨조차 제대로 틀지 못한다. 말 그대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다. 최고 11.7배까지 가중되는 징벌적 누진제 비판은 매년 여름 되풀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민을 더 열렬하게 만드는 것은 누진제를 강변하는 산자부 관료의 권위주의적 태도이다. 에어컨을 하루 서너 시간만 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 아침부터 시작된 짐통더위가 기록적 폭염으로 이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도저히 잠을 이루기 어려운 열대야도 수십 일째 지속 중이다.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서 긴팔 옷을 입고 근무하는 고위 관료들이나 국민들의 사정을 알 턱이 없다. 거짓 논리로 누진제를 옹호하는 점은 더 어이없다.

가정용 전력 수요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지금보다 가정에서 20%를 더 써도 전체 사용량에서는 15.6%에 불과하다. 여름철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피크 타

임은 오후 2~3시이다. 가정용 전력 소비는 그 시간에 오히려 줄어든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정용 전력 소모가 많은 시간은 가족이 모이는 저녁 7시 시작하여 9시 전후로 피크를 이룬다. 가정용을 더 쓰면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협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것도 징벌적인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상용용과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하든지 모두가 사용량만큼 내게 하든지 같이 대우하란 얘기다. 전기료 8만여 원 내던 집이 3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면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삶이다.

어린 아이들이나 노부부도 있는 집에서 8월 전기요금이 100만 원까지 나올 거란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하루 4시간만 더운 모양이요?” “고위 관료들은 부자라 전기료가 부담스럽지 않나 보네요.” 산자부 공무원의 인터뷰 기사에 달린 수많은 댓글의 일부이다.

전기요금 논란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국민을 대하는 관료들의 시각이다. 열

마 전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교육부 공무원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기요금을 대하는 관료들의 생각 역시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국민은 계도의 대상이요 다스림의 객체라는 것이다. 똑똑한 고시 합격자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우매한 국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라는 발상이다.

여론에 오불관언하겠다는 태도는 자신들이 국민의 위에 있다는 생각의 발로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갑자기 바뀐 관료들의 태도는 우습기까지 하다. 누진제 조수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더니 “누진제 완화 검토하고 있었다”고 180도 회전한 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괜한 게 아님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앞서 인용한 온라인 행정학 사전은 ‘관료주의’를 이렇게 맺고 있다. “민주주의가 생활화되지 못한 후진국이나 발전도상국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관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나 발전도상국’에 불과하다. 특히 ‘민주주의가 생활화되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부족한 관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내일이면 시집을 가는 딸을 불러 앉혀 놓고 교훈을 주려고 아버지가 말했다. “애야, 너는 시택에 가면 절대로 착한 일을 해선 안 되느니라.” 뜻밖의 말씀에 의아해하며 딸이 여쭙었다.

“아버님, 그러면 나쁜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착한 일을 하지 말라 했거늘, 하물며 나쁜 일을 하라 하겠느냐?” 딸은 영문을 몰라 그저 아버지만 쳐다 볼 뿐이었다. 잠시 뜸을 들인 아버지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공동운명체 ‘공명조’(共命鳥)

“추호라도 ‘착한 일 한다’는 생각으로 착한 일을 해선 안 된다.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해 줄 것이다.” 세상의 머느리들은 다음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머느리로 행동은 잘못 하면서 속으로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머느리로 행동은 잘하나 마음에는 생색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머느리로 행동도 잘하면서 생색내는 마음도 없습니다.

현명한 머느리는 행동은 잘 하지만, 은연 중이라도 생색내는 마음이 남아있으므로 훗날 시택식구들에게 자칫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지혜로운 머느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보면 현명한 머느리라고 똑같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마음상태는 ‘천지 차이’인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가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지혜의 무상(無相)이요 무주(無住)이며 ‘무주상보시’입니다.

‘불분행집경’에는 공명조(共命鳥)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 새는 한 개의 몸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다. 각각의 이름은 가루다와 우파가루다인데, 이들은 교대로 잠을 잤다. 어느 날 가루다가 자는 동안 우파가루다는 향기가 좋은 열매를 발견하고 생각했다. ‘내가 이 열매를 혼자 먹는다고 해도 뱃속에 들어가면 둘 모두가 배부를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한 우파가루다가 가루다에게 알리지 않고 열매를 혼자 먹었다. 가루다가 깨어나서 자신의 배가 부르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고는 자초지종을 묻고는 분노했다. 원한을 품은 가루다는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보고 우파가루다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것을 먹었다. 결국 가루다와 우파가루다는 둘 다 죽고 말았다.”

우리로 공명조입니다. 부부는 머리가 둘인 공명조이고, 네 식구는 머리가 넷인

공명조, 직원이 삼십 명인 회사는 머리가 삼십인 공명조, 우리나라는 머리가 7500만명인 공명조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껴야 하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껴야 합니다. ‘남’은 ‘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한과 북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노인과 청년, 남자와 여자, 전라도와 경상도, 우리는 모두 공명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명조이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이름 모를 한 송이 들꽃에서 우주를 발견하며, 전기요금 누진제로 고통 받는 한 필부의 삶에서 5000만 민중의 영혼을 발견하는 8월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기고

고준위방폐물 관리 절차법이 필요한 이유



이경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상반기 과학책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 이상 늘었다는 보도다. 알파고나 증강현실 등 사회적 관심을 모은 과학기술의 성취가 영향을 끼친 데다, 자녀교육과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이끈 결과란다. 과학분야에 대한 이런 관심은 사회적 편견을 해체하고 합리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천동설을 믿던 인류가, 현재에는 우주탐험까지 나서게 된 것이 일례다.

물론 이런 진전은 그저 이뤄지지 않는다. 과학적 성과를 국가정책과 국제질서로 정하고 법으로 강제한 결과다.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로 손꼽히는 원자력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적 기술 패권은 찬란한 성과만큼이나 심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국제 공동의 약속으로 만

들고 각국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책으로 규정해두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을 시작하기 20년 전부터 원자력법을 만들어서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다.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원자력발전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법은 없었다. 한빛원전을 비롯한 각 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다 지난 11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한빛원전을 비롯한 원전의 고준위방폐물을 빼기 위한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법이 있어야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절차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의 출발이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본조건이다. 법의 내용을 보면 더 그렇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을 빨리 입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3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관리 절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다. 정부

는 5단계의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고준위 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제시된 ‘관리 절차법’에 의하면 정부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장이 주민의사 확인 없이 유치지역 신청을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법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명시했기에, 한빛원전을 지을 건설지정시설을 고준위방폐장 부지가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슬쩍 고준위처분장화하는 것이 법으로 확실하게 금지된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건설지정시설 설치에 고준위처분장으로 둔갑할 것을 우려하여 사용후핵연료 건설지정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쪽이나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관리 절차법’의 입법화를 더 환영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관리위원회’의 설치 조항이다.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업무를 실행할 조직이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민간전문가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정말 원전을 걱정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한빛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빼가기를 원한다면 법으로 담보된 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속담을 기억하면 된다.

셋째,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

리소속으로 설치한다는 규정이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는 특목에 기대한다. 그동안 한빛원전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지역주민이 느끼는 체감적 변화는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원전지역이라는 심리적 부담 속에서도 지원 문제를 얘기하면 마치 안전을 담보로 눈앞의 이익을 요구한다거나 지역이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통과되면 이런 부담 또한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 절차법’에 의해 고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된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인 건설지정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지역지원 문제도 보다 명쾌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넘는 일이다. 산을 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지만, 산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목전의 현실이다. 정책과 법은 이 산을 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산이 미흡수록, 빨리 넘고 싶을수록 적절한 절차는 힘이 된다. 다행히 함께 산을 넘어야 할 정부도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이라는 도구를 제시하고 있으니, 이 도구가 더 유용해지도록 지혜를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다.

社說

쌀이는 쌀, 막힌 대북지원, 타들어가는 농심

쌀 생산량 증가로 매년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이 쌓여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풍년의 저주’, ‘풍년의 역습’이라 할 만하다.

정부 양곡창고에는 지난 6월말 현재 쌀 175만 t이 쌓여 있다고 한다. 올해도 날씨가 좋아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째 쌀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쌀 누적 재고는 200만 t에 이르는데 175만 t이 우리 국민의 6개월치 소비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쌀이 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쌀 생산량이 많아지고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위 ‘풍년 기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작황이 좋아 생산이 늘어나면 농업소득은 도리어 줄어드는 현상이다. 특히 쌀 재고가 쌓이면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고 당면히 쌀 재배 농민이 많은 전남 지역의 피

해가 커진다.

쌀은 가격이 내리거나 하락이 예상되면 ‘홍수 출하’가 이뤄져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과잉 생산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현지 쌀값이 14만 1896원(80kg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7% 떨어졌는데 최근 5년 중 최저치다. 올해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데 자칫 전년도 재고 쌀까지 풀리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쌀값 폭락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쌀을 둘러싼 모순의 타래가 잔뜩 꼬여 있는데도 정부는 정치권과 농민 눈치 보기에 급급한 채 맷질 처방으로 그때그때 모면하려 든다. 소비축진운동과 가공 활성화 정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정 역량을 총 동원해 쌀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軍 시설 이전 부지 선정 먼저 충분한 설득을

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군사 시설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 군 공항은 최근 국방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곧 시작된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는 신설 대상지가 연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 군사 시설 후보지 선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군 공항의 경우엔 소음 피해 때문에 새로 들어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선택 반기기 어려울 것이다. 둘 다 군사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일정 부분 불면도 감수해야 한다.

군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방안과 별도의 지역에 새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다. 무안이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 서남권 9개 군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지역에서 군 공항을 대표적인 ‘남비 시설’로 여겨 반대하게 되면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전 부지 결정 절차상 주민투표 통과가 어려워 표류할 수도 있다.

방공포대는 광주권 3곳과 전남 1곳이 거론된다. 여의치 않으면 기존 후보지 외에 광주·전남 전역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물색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반발을 염두에 두었을 직하다.

어찌 됐든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대상지 결정 과정에서 그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 사회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 시설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군 시설 이전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혁명과 반란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배를 받던 사람이 지배를 하던 사람을 쓰러뜨리려는’ 시도가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책을 들춰 보면, ‘반란’은 말아도 ‘혁명’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권력 탈취 시도가 있더라도 기존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패로 끝난 반란의 주동자와 참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아시리아’의 왕 ‘이슈르나르시팔 2세’는 기원전 879년 수도 니무드에 새로 지은 궁전의 완공을 축하하면서 무려 6만9574명을 초청해 열흘 동안 잔치를 벌였다. 당연히 순수한 ‘호의’는 아니었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수차례 반란을 진압했던 왕은 특히, 궁정의 벽에 자신이 어떻게 반란자들을 처형했는지를 글로 새겨 넣어 모두 자들을 사로잡아 살가죽을 벗겨낸 뒤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쌌노라. 일부는 아예 그 기둥 속에 집어넣어 버렸고, 또

다른 일부는 대못을 박아 기둥에 꽂았노라. 나는 많은 백성의 살가죽을 벗겨 그 가죽을 벽에 발라 놓았노라.”

권력의 유혹이 치명적인 만큼, 지금도 지구상에는 권력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권력 탈취의 도구가 칼과 창에서 총과 대포에 이어 투표로 바뀌었을 뿐, 실패로 끝난 반란의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처참하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15일 발생,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난 터키의 쿠데타에서는 반란 주모자와 참여자 수천 명이 체포돼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다.

우리 호남도 특정 리나리시팔 2세’는 기원전 879년 수도 니무드에 새로 지은 궁전의 완공을 축하하면서 무려 6만9574명을 초청해 열흘 동안 잔치를 벌였다. 당연히 순수한 ‘호의’는 아니었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수차례 반란을 진압했던 왕은 특히, 궁정의 벽에 자신이 어떻게 반란자들을 처형했는지를 글로 새겨 넣어 모두 자들을 사로잡아 살가죽을 벗겨낸 뒤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쌌노라. 일부는 아예 그 기둥 속에 집어넣어 버렸고, 또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